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씩 챙기고 해체 수순

‘의원 꺾주기’ 꿈수 준연동형제 국힘-국민의미래, 합당 의결 민주-민주연합도 내달 합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합당 수순을 밟고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등 두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28억씩씩 받고 창당 2개월도 안돼 사라진다.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합당한 모당(母黨)에 귀속되는 만큼, 거대 양당이 선

거로 돈벌이를 했다는 비난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꿈수창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 창당 2개월 만이다. 상임전국위원 61명 중 43명(70.49%)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원이 찬

성해 오는 22일 전국위가 소집된다. 전국위에서 흡수 합당 의결을 위한 ARS 투표를 진행하고, 합당이 의결되면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국민의미래는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당선인들을 소속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2일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할

예정이다. 민주연합은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꺾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했다.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母)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의 경우, 새로운미래와의 합당 및 철회 과정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규정상 반환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기시다 통화 “한일·한미일 협력 평화 기여”

北 대응 공조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발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에서 7시15분까지 15분 간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18일 밝혔다. 통화는 기시다 총리 제안으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지난해 일곱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도 정상간·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통화를 요청한 배경에 “앞선 한국 총선에서 여당 패배로 일한 관계에 악영향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보조를 재확인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지현 기자



빈소서 만남 이재명·이준석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종철 열사 어머니 고 정치순 여사 빈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

일본 또 ‘독도 영유권’ 주장... 민주, 강력 비판

日 “강제동원 배상 수용불가” 민주 “尹, 무슨 협력 말하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몰염치에 아무 소리도 못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이틀 전 ‘독도는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어제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모르는 듯 어젯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로 굳건한 협력관계를 과시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동원 문제는 하등 중요치 않나.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

하는 일본 정부와 대체 무슨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빗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하다”며 “우리 정부의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가 파산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밀 빠진 독에 물 붓듯 한심한 대일 외교를 과시할수록 국민에게는 더욱 한심해 보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일 굴욕외교가 파산했음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국민의 자부심을 세우는 외교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에 차규근

조국혁신당은 18일 당 대표 비서실장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신의 차규근(사진) 당선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당선인, 홍보위원장은 구글 매니저 출신의 이해민 당선인이 맡게 됐다. 최우규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신우석



사무처 사무부총장, 조용무 정부실장, 김보협·배수진·강미정 대변인 등도 임명됐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번 1차 인선을 시작으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우리 당 조직을 빠르게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검찰 술자리 회유’ 항의... “감찰권 발동해야”

검찰대책위, 대검 등 항의 방문 “野 대표 죽이려 없는 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기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어 수원구치소를 찾아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찾아 수원지검 감찰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독재정기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장경태·김승원·김민석·송옥주·정성호 의원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이언주·김용만·모경중·김동아·이재강·김준혁 등 22대 총선 당선인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는 쌍방을 대복송금 사건 관련해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담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습한 정황을 진술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이 해당 의혹을 반박한 데 대해선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피의

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이냐.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오만한 검찰 독재세력이 야당을 탄압하고 없는 죄를 조작해 수사를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검찰 지시해야 한다”며 “이화영이 이런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수원지검을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가 야당 대표를 유폐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건 수원지검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검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답변해야 하고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확

실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계 의원은 “지금 수원지검이 했던 해명들을 보면 단순하기 짝이 없다”며 “지방분청에 해당하는 지방검찰청에서 (폐쇄회로) 보존 기간이 사인, 민간인과 다를 바 없다. 영상녹화실로 지칭되는데 보존기간이 민간과 다르지않단 주장이 납득 가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지금 문제되는 사람들의 출정기록을 금방 밝혀내지 않나”라며 “대검찰청이 검찰을 위해서라도 감찰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가지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경태 전 쌍방을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을 즉 직원이사왔던 거 같다. 구치소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쌍방을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일체 없다”며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